

# 수소차 느는데 인프라는 태부족...운전자만 '봉'

### 보급량 1200대 넘는 광주 충전소 외곽에 5곳 뿐 '충전소 찾기 전쟁' 정비 가능업체도 5곳, 수리·정비 불편 커...시 "인프라 확충 어려워"

#.지난해 3월께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차)를 자가용으로 구입한 정희도(46·나주시 빛가람동)씨는 차를 산 뒤 오히려 걱정거리가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나주에서 광주시 서구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다 보면 보통 1주일에 한 번씩은 충전해야 하는데, 충전소가 광주 외곽에 5곳밖에 없고 운전시간도 오후 6~8시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매번 '충전소 찾기'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씨는 "급히 움직일 일이 있는데 충전소 측에서 '수소 떨어졌다', '점검 중이다'는 문자를 보내와 가슴이 철렁할 때도 많다"며 "무작정 친환경이라고 차량 보급할 게 아니라 먼저 인프라를 확실히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내 수소차 보급량이 매년 늘어 1200대를 넘겼지만, 충전소와 정비소 등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광주시가 올해 200여대의 수소차를 추가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터라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2023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승용차 200대, 시내버스 1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보급 대상은 광주지역 내 거주자 또는 사업장이 광주에 있는 법인이며, 차량 1대 당 승용차 3250만원, 버스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경우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도 걸렸다.

광주시내 수소차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41대 뿐이었으나, 이후 해마다 200여대씩 늘어난 해 기준 1240대까지 증가했다.

반면 수소차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내 수소차 충전소는 총

6곳 뿐이다. 각각 광산구 진곡수소충전소·동곡수소충전소, 남구 인암수소충전소, 서구 벽진수소충전소, 북구 월출수소충전소·장동수소버스충전소(버스전용) 등이다. 충전기는 각 충전소에 1기씩만 설치돼 있으며, 장동 버스전용 충전소에만 2기가 설치됐다.

승용차 충전기는 광주에 단 5기밖에 없는데, 각 충전기의 1일 수용 능력은 17기당 70여대 수준으로 하루 총 377대만 충전할 수 있는 실정이다. 월출충전소와 벽진충전소에서는 각각 1대와 2대씩 시내버스 충전 수요도 감당하고 있어 실제 승용차 충전 수용 능력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또 충전소가 모두 광주 외곽에 위치해 시내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차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렇다 보니 수소차 차주들 사이에서는 "운전대를 잡으면 충전소 걱정부터 든다", "충전소를 가도 매번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 시간 낭비가 심하다"는 등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수리·정비에 대한 불편도 크다. 내연기관과 달리 배터리·모터로 구동하는 구조 탓에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 정비소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해 전문 정비업체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조차도 광주에 몇 곳 없기 때문이다.

국도교통부 '자동차365' 포털에 따르면 광주 시내 수소차 정비가능 업체는 5곳 뿐이다. 각각 광산구에 3곳, 서구에 1곳, 남구에 1곳이 있는 게 전부다.

이에 차주들은 "간단한 정비를 받으려고 해도 일반 정비소에서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조차 버거워한다"며 "특정 전문 정비소에만 수리 수요가 몰려 정비 한 번 받기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인프라 확충 속도를 높이기에는 한계



오는 2월 오픈을 앞둔 광주시 서구 매월수소충전소. 광주에서 7번째로 문을 여는 충전소이자 유일한 민간 수소 충전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충전기 1기를 설치하려면 최소 991㎡(300평) 이상 부지가 필요하며, 부대 시설까지 고려하면 충전소 1개소 만드는 데 최소 1500㎡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그만큼 큰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1기당 30억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도 부담이라고 밝혔다. 6개 충전소가 모두 해마다 1~2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 무턱대고 충전소를 늘릴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 탓에 광주시는 올해 월출충전소에 충전기 1기를 증설하고, 2024년 광산구 첨단3지구 개발 이후 버스전용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것 외에 별도의

충전소 설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나마 민간에서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숨을 돌리고 있다. 오는 2월 서구 매월동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소 1곳이 새로 오픈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광주공항 인근에 충전소 2기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충전소 수용 능력은 광주 시내 1240대 차량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공공부지나 기존 CNG 충전소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부족한 예산 내에서도 충전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새 교육과정에 빠졌던 5·18 교육부, 교과서 집필기준 명시

지난해 말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기술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등이 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난 27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검정 심사 기준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중학교 역사과 심사 기준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등을 학습요소에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고교 한국사 역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제주 4·3 사건, 5·16 군사 정변, 유신 독재와 반대 운동, 6월 민주항쟁, 7·4 남북 공동 성명 등을 학습요소로 제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헤어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 선고

중국인 유학생인 A(24)씨는 지난해 4월 한국인 여자친구 B(22)씨와 헤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개월 가량 B씨와 교제한후 헤어졌는데도 B씨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

특히 A씨는 B씨와 교제한후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가했다. 해당 영상을 가족, 학교 동창 등 주변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B씨를 괴롭힌 것이다. 또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씬을 타다 들리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죽이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했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한때 자살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협박 혐의로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지만 B씨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는 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고법원장 배기열·광주지법원장 박병태

고위법관 전보 인사...윤준 광주고법원장은 서울고법원장으로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에 배기열(58·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광주지방법원장에는 박병태(56·25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광주가정법원장에는 안동범(59·26기)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전보했다. 윤준(62·16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고영구(65·20기) 광주지방법원장은 퇴임한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다음달 20일자로 시행된다.

신임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은 충북 달성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



배기열 광주고법원장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냈다.

고향인 장흥인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서울 오산고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안동범 광주가정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환일고,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나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서구청 직원이 정의당 현수막 임의 철거 '논란'

정의당 "나흘만에 불법철거 당해" 서구청 "실수로 철거...재발 방지"

광주 서구청 직원이 최근 정의당에서 내건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거리에 정당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불과 나흘 만에 서구청 직원에 의해 '불법 철거' 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상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다룬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돼 15일 동안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정의당 관계자는 예정 철거일에 앞서 현수막이

철거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 서구청 현수막 정비만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지난 15일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실수로 현수막을 철거했으며 고의성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은 하지 않았다.

박형민 정의당 광주시당 서구갑 위원장은 이와 관련 "서구청이 정치 개입이자 정당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정당 의원이 걸어놓은 현수막은 건드리지 않고 정의당 현수막만 훼손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또 "손해 배상을 요구했더니 적법 절차를 밟지도 않고 개인 계좌로 무턱대고 현수막 5만원, 설치비 2만원 총 7만원을 보내왔다"며 "구청이 부담할 배상을 왜 직원 개인이 부담하느냐고 따지자, 담당 공무원은 '폭발하기 전에 그만하라'

며 도리어 협박조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구청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가 실수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담당 직원이 민원인에게 폭언한 것 또한 수 시간 전화 항의에 시달리다 벌인 일로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광주시당 측에 현수막 게시 비용 일체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관련 직원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행정심판위원회에 서구청의 불법 철거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경위서를 서구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받은 손해배상금을 서구청에게 돌려주고 적법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